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원 (hklee@kiep.go.kr, 044-414-1069)



차 례

1. 추진 배경
2. 일본 기시다 정부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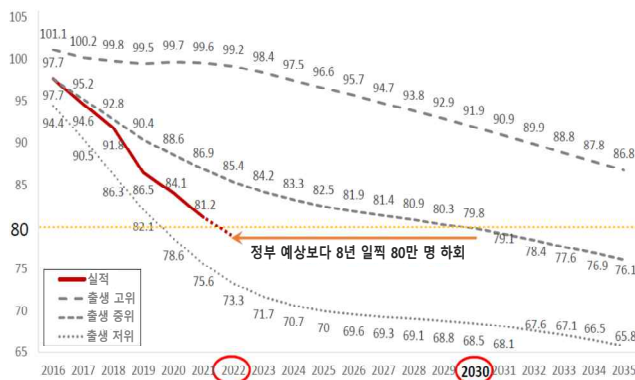
- ▶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의 사상 최소치로 감소함에 따라, 기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육아 정책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2023년 3월 말에 발표
 - 2022년 기준 일본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5.1% 감소한 79만 9,728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부가 80만 명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한 '2030년'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임.
 -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함.
- ▶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
 - 첫째, 육아 관련 경제적 지원의 강화 차원에서 아동수당 확충, 출산·의료비·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육아 세대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 둘째, 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임신 시기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확충, 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 보육 확충, 새로운 방과후 어린이종합플랜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맞벌이·공동육아 추진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육아 부모 지원을 위한 근무방식의 유연화 추진, 근무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방침임.
 - 넷째, 위의 세 가지 부문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어린이·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의 차별화, 정책 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존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차원이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혼재함.
- ▶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책 과제별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한·일 정부간 대화를 통해 공통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추진할 필요
 - 최근에 발표된 저출산 정책에 구체적인 정책 목표 및 달성시기가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으므로, 향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시 이를 점검·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일 양국의 정부간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국이 공통의 정책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전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협력의 확대 추진이 요구됨.

1. 추진 배경

■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사상 최소치)로 감소하면서,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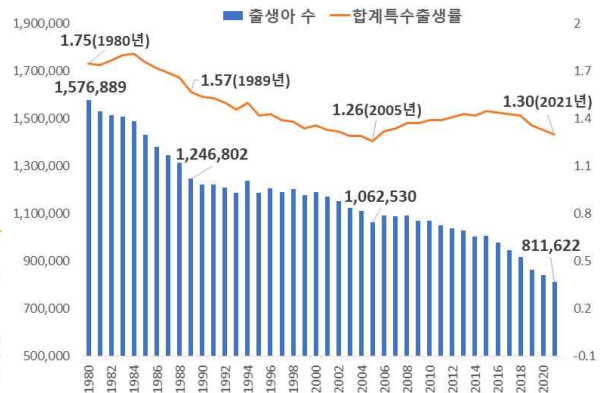
-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16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하회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5.1% 감소한 79만 9,728명으로 추산(속보치)됨(그림 1 참고).
 - 이는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될 것으로 일본정부가 예상한 '2030년'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임.
- 또한 합계특수출생률은 '1990년 1.57 쇼크'¹⁾ 이후 약 30년간 평균 1.39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에는 1.30임(그림 2 참고).

그림 1. 출생아 수와 장래인구 추계 비교



자료: 내閣官房(2023), 「こども政策の強化に関する関係府省会議 - 参考資料集」, p. 3.

그림 2. 출생아 수 및 합계특수출생률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2022), 「令和3年(2021)人口動態統計(確定数)の概況」, p. 5, p. 8을 활용.

■ 일본정부는 2023년 1월 기시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육아 정책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수차례의 검토 회의를 거친 후 향후 3년간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육아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시안)을 3월 31일에 발표하였음.

- 1월 이후 어린이정책 담당장관의 주관하에 '어린이정책 강화 관계부처 회의'를 6회 개최하고, 총리 주최의 '어린이정책 대화'를 3회 개최하였음.
- 일본정부는 6월 말 발표 예정인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3」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 확대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방침임.

■ 이하에서는 기시다 정부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1) '1990년 1.57 쇼크'란 전년(1989년)의 합계특수출생률이 1.57로, '병오년(말띠해)'이라는 특수요인에 의해 사상 최저였던 1966년의 합계특수출생률 1.58을 밑돈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의 충격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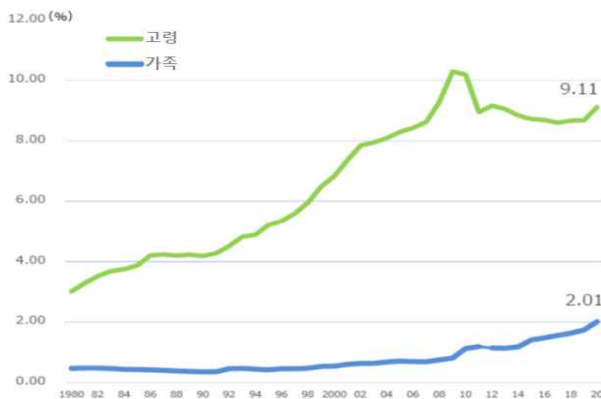
2. 일본 기시다 정부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

가. 과거 30년간 저출산 정책의 변천²⁾

■ 일본에서 ‘저출산’을 정책 과제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1990년의 ‘1.57 쇼크’ 이후임.

- 1989년 전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1994년 12월에 4개 부처(문부·후생·노동·건설)의 장관 합의에 기초한 ‘엔젤 플랜’이 책정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 사업’으로서 보육의 양적 확대, 다양한 보육(저연령아 보육, 연장보육 등)의 내실화 등에 대해 수치목표를 정하였음.
 - 그러나 같은 시기에 ‘골드플랜’에 근거해 기반 정비를 추진한 고령사회대책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지체되었고, 정책의 내용도 보육대책이 중심이었음.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책 분야는 보육뿐만 아니라 고용, 모자보건, 교육 등으로 확대되어 2003년에는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2004년에는 저출산사회대책 대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서 저출산 대책은 정부 전체의 대응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음.
 - 또한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에 의해 2005년 4월부터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외에 기업도 행동 계획을 책정하게 되어 직장에서의 ‘양립 지원’ 대응이 추진되었음.
- 이 시기에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어린이·육아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은 한정적이었음.
 - 예컨대 GDP에 대한 가족관계 사회지출비의 비율은 1989년도의 0.36%에 비해 1999년도에는 0.53%로 미미한 성장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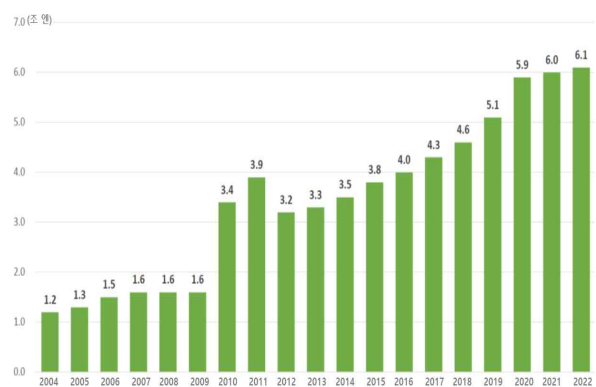
그림 3. 고령 및 가족 관계 사회지출의 비교



주: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임.

자료: 内閣官房(2023), 「こども政策の強化に関する関係府省会議 - 参考資料集」, p. 5, p. 8.

그림 4.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 추이



2) こども政策担当大臣(2023. 3. 31), 「こども・子育て政策の強化について(試案)~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に向けて~」, pp. 2~3.

- 2010년대 들어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하에서 관련 재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큰 전기가 마련되었음.
- 2014년 소비세율 인상(5%→8%)에 따라 사회보장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육아 분야에 7천억 엔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2017년에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추가 재원으로 2조 엔이 확보되었음.
- 이러한 안정재원의 확보를 배경으로 대기아동 대책,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고등교육 무상화 등의 대응이 추진되면서, 대기아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해소되는 등 일정한 성과³⁾를 거두었음.
- 이에 따라 GDP에 대한 가족관계 사회지출비의 비율은 2013년도의 1.13%에서 2020년도에는 2.01%까지 상승했으며, 또한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당초 예산 기준)은 2013년도 약 3조 3천억 엔에서 2022년도에는 약 6조 1천억 엔 규모로 10년간 2배 정도 증가하였음.

표 1. 일본정부의 과거 저출산 대책 현황

시기	주요 저출산 관련 정책	비고
1994년 12월	엔젤 플랜,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1995~99)	관계부처 합의
1999년 12월	저출산대책추진 기본방침, 신엔젤플랜(2000~04)	관계부처 합의
2001년 7월	일과 양육 양립 지원 등의 방침	각의 결정
2003년 9월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2003년 9월 시행),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2003년 7월부터 단계 시행)	법률
2004년 6월	저출산사회대책 대강	각의 결정
2005년 4월	지방공공단체·기업 등 행동계획 책정·실시(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에 의거)	지자체 행동계획
2010년 1월	어린이·양육비전	각의 결정
2012년 8월	어린이·양육지원법 등 어린이·양육 관련 3법	법률
2014년 12월	장기비전·종합전략	각의 결정
2015년 3월	저출산사회대책 대강	각의 결정
2015년 4월	차세대양육지원대책 추진법 연장(2015. 4~2025. 3)	법률
2016년 4월	어린이·양육지원법 개정(시행)	법률
2016년 6월	일본1억총활약플랜	각의 결정
2018년 4월	어린이·양육지원법 개정(시행)	법률
2018년 7월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공포)	법률
2019년 10월	어린이·양육지원법 개정(시행)	법률
2020년 4월	대학 등에서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법률
2019년 12월	장기비전·종합전략(제2기)	각의 결정
2020년 5월	저출산사회대책 대강	각의 결정
2020년 12월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 방침	각의 결정
2021년 5월	어린이·양육지원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2022. 4 시행)	법률
2021년 12월	어린이정책의 새로운 추진체제에 관한 기본방침(2023년 어린이가정청 설치 포함)	각의 결정

자료: 内閣府(2022), 『少子化社会対策白書』, pp. 48~49.

- 일본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지난 30여년간 정책지원 분야 확대, 안정재원의 확보 등을 통해 대기아동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출생아 수 감소, 낮은 합계특수출생률과 같은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음.

3) 대기아동은 육아 중인 보호자가 어린이집 또는 돌봄시설에 입소 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할 수 없어 입소를 기다리는 상태(대기 상태)에 있는 아동을 의미함.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대기아동 수는 2013년 22,741명, 2015년 23,167명, 2020년 12,439명, 2022년 2,944명으로 대폭 감소함. 2020년 이후 대기아동이 감소한 배경에는 보육의 기반(신규 개설, 증개축, 이용정원·수용인원 수 확대 등) 확충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배경으로 한 사립이용 자제 등이 있음. 厚労労働省(2022. 8. 30), 「保育関係取組のまとめ(令和4年4月1日)」を公表します, p. 3.

- 이러한 저출산 지속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안정,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가사·양육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상황, 육아 고립감이나 부담감, 육아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 개개인의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실현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202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대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 강화 △모든 육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충 △육아휴직 강화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 및 제도의 충실화 추진을 제시함.⁴⁾

나. 기시다 정부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⁵⁾

1) 향후 일본 사회의 방향

- 일본정부는 3월 31일에 발표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서 향후 일본 사회의 방향으로서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사회 전체의 구조·의식 변화 △모든 육아 세대에 대한 지속 지원의 세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함.
- 첫째, 결혼·취직·출산·육아 등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life event)이 겹치는 시기에 현재의 소득과 장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 이를 위해 임금인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 정비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과 함께, 재교육(reskilling)에 의한 능력 향상 지원, 일본형 직무급 확립, 성장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 이동을 진행시키는 삼위일체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방침
- 둘째,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남성, 지역사회, 고령자 및 독신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바꾸어가는 것이 긴요함(‘어린이 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 전체의 의식 개혁’).
 - 기업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직장 복귀 후 양육기간을 고려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 추진이 필요
- 셋째, 육아와 관련하여 일생의 각 단계(life stage)에 따라 지속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 요구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모든 육아 세대를 지속 지원’).
 - 지난 10년간 사회경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면서 향후 추진해야 할 육아 지원정책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과거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원했던 방식에서 행정의 지속적 동반을 통해 먼저 당사자를 찾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종합적인 제도체계 구축)할 필요

2) 구체적인 대응책

-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함.

4) 「首相会見の要旨・異次元の少子化対策挑む／増税前解散、可能性の問題」(2023. 1. 5), 『日本経済新聞』.

5) こども政策担当大臣(2023. 3. 31), 「こども・子育て政策の強化について(試案)~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に向けて~」, pp. 6~17.

-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0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혼인 건수가 약 10만 쌍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대에는 젊은 인구가 현재의 배속으로 급감하여 저출산 경향은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o 1990~2000년의 10년간 출생아 수는 약 3% 감소, 2000~10년은 약 10% 감소, 2010~20년은 약 20% 감소를 보였음.

■ 첫째, 육아 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차원에서 아동수당 확충, 출산·의료비·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육아세대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 아동수당 수급의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지급기간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함.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 및 수당액, 재원마련 등에 대한 검토는 2023년 6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함.
- 지금까지 지원이 소홀했던 임신·출산기~2세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추경예산으로 창설된 ‘출산육아응원교부금’(10만 엔)의 제도화, 출산비용 보험적용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함.
- 지자체의 어린이 의료비 조성을 지원하고, 학교급식비의 무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급식 실시율, 보호자 부담 경감책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함.
- 교육비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비의 부담 경감이 중요한 과제인 현실을 감안해 대부형 장학금 감액반환 제도의 이용가능 연수입 상한을 325만→400만 엔으로 인상, 수업료 감면 및 급부형 장학금 지원을 2024년부터 다자녀 세대 및 이공계·농업계 학생이 있는 중산층(세대 연수입 약 600만 엔)으로 확대, 석사 단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후불제도’(가칭)를 도입하기로 함.
- 육아 친화적인 주거 확충을 목표로 육아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 육아세대의 주택 입주를 위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 빈 집 개보수 등 기존 민간주택의 활용을 추진함. 또한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다자녀 세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글상자 1. 저출산 대책의 목표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

- 일본 호세이대학의 오구로(小黒)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2023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저출산 경향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좁혀 지원을 한 곳에 집중 투하하고, 소요 재원은 소비세율 2%p 인상을 통해 마련하자고 주장
 -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가정에 대한 서비스 확충, 일하는 방식의 개혁의 세 가지 방향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이를 통해서는 출생아 수의 대폭 증가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좀 더 과감한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출생아 수의 감소(=‘합계특수출생률’ 하락: $\text{합계특수출생률} = (1 - \text{평생 미혼율}) \times \text{결혼여성의 출생아 수}$) 경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생 미혼율을 낮추는 정책과 결혼여성의 출생아 수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
 - 예컨대 평생 미혼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결혼여성의 출생아 수를 현재의 2 정도에서 3으로 끌어 올리면, 출생아 수는 현재의 약 8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크게 증가
 - 결혼여성의 출생아 수를 2에서 3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출산 시 자녀 1인당 50만 엔이 지급되는 ‘출산육아일시금’을, 차원이 다른 대책으로서 자녀 1인당 출산육아일시금을 500만 엔으로 증가시킬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이 경우 출생아 수가 80만 명이면 4조 엔, 120만 명이면 6조 엔의 재원이 필요한데, 2022년 말 방위비 증액 재원 논의를 감안하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소비세율을 2%p 올려 6조 엔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자료: 小黒一正(2023. 1. 31), 「異次元の少子化対策について考える — 資源を1点に集中投下でトレンド転換を—」, 東京財団政策研究所.

- 둘째, 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임신 시기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확충, 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 보육 확충, 새로운 방과후 어린이종합플랜 실시, 다양한 지원 요구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임신 시기부터 출산·육아까지의 '동반형 상담지원'을 제도화(상담절차의 디지털화 포함), 산후 케어사업의 실시체제 강화, 국립성육의료센터에서 여성 건강 및 질환에 특화된 연구 수행 등을 추진할 방침임.
 - 어린이집·유치원·인정어린이집⁶⁾ 운영비의 기준인 공식가격의 개선, 보육사의 배치 개선(1세 유아는 6대1→5대1, 4~5세 아동은 30대1→25대1로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부모의 취업요건과 관계 없이 어린이집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누구나 통원제도'(가칭)를 창설하고, 어린이 환자(병아)에 대한 보육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육아 세대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향후 어린이가정청에서 책정하는 '어린이대강' 내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되(글상자 2 참고), 이 가속화 플랜에서는 지원기반 및 자립지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함.
 -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및 가족돌봄청년인 영케어리(young carer)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가정센터(2022년 도입) 체제 강화 도모 및 육아 세대 방문사업을 확충, 지역의 장애아 지원체제 강화 및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적 돌봄아, 청각장애아 등을 위한 지역 연계체제 강화, 한부모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강화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고등직업훈련 촉진 급부금제도 확충 등으로 대응

글상자 2. '어린이대강'의 논의 방향

- 2023년 4월 18일 제1차 어린이정책추진회의(회장: 기시다 총리)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어린이대강'의 작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어린이기본법」(2023년 4월 시행)에 따라 어린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대강'은 지금까지 별도로 추진된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 '어린이·청년 육성 지원 추진 대강' 및 '어린이 빈곤대책 대강'을 하나로 묶어 어린이 정책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 등을 일원화
 - '어린이대강'이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정책'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어린이 및 육아 가정에 관한 정책, 예컨대 젊은이 대상 정책과 교육·고용·의료·복지 등의 폭넓은 정책을 포함
 -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대강 안을 작성할 때는 어린이, 젊은이, 육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어린이의 주거, 안전 확보 등을 비롯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젊은이 지원, 육아 지원, 어린이·젊은이를 지원하는 담당자 육성 등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지혜를 결집하여 논의를 진행
 - 이를 위해 「아동가정청 설치법」에 따라 어린이가정심의회에서 어린이와 젊은이, 육아 당사자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5년 정도를 감안한 어린이정책의 기본 방침이나 중요사항 등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

주: '어린이대강'은 2023년 가을경 최종적인 방안이 도출될 예정임.
 자료: こども家庭庁(2023. 4. 18), 「こども大綱の案の作成の進め方について(案)」.

- 셋째, 맞벌이·공동육아의 추진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 부모 지원을 위한 근무방식의 유연화 추진, 근무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방침임.
 -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있는 남성의 가사·육아 관련 시간⁷⁾을 늘려 맞벌이·공동육아를 정착시키기

6) 인정어린이집은 교육과 보육을 함께 실시하는 시설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의 장점을 갖고 있음. 보호자의 취업 여부에 상관 없이 이용이 가능함. 인정어린이집은 2012년 909개소에서 2022년 9,220개 소로 10배 이상 증가했음.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2023), 「認定こども園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令和4年4月1日現在)」.

위한 첫걸음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제도 및 급여의 양 측면에서 대응하기로 함.

- [제도 측면] '21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3.97%로, 그 목표를 2025년 공무원 85%(1주 이상 취득률), 민간 50%, 2030년 공무원 85%(2주 이상 취득률), 민간 85%로 설정함. 이외에 육아·간병휴직법상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제도 확충 검토 등을 추진
- [급여 측면] '산후 아빠 육아 휴직'(최대 28일)을 염두에 두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현행 67%(실수령 80% 상당)에서 80%(실수령 100% 상당)로 인상하고, 여성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급여율을 인상, 남녀 모두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면제 및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조치를 도입하며, 동료 직원에 대한 응원수당 지급 등 육아휴직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대폭 강화
- 자녀가 3세~초교 입학 전인 경우에 단시간 근무, 재택근무, 출퇴근시간 조정, 휴가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에 대한 제도를 검토함. 동시에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 시간 단축근무 선택 시 급여를 창설하고, 남녀간 급여 수준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추진함. '자녀간호휴가'(자녀 취학 전 연 5일간 취득 인정)와 관련해 대상 아동의 연령 및 휴가사용 사유의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함.
-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안정망의 구축 차원에서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의 노동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자영업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해 육아기간과 관련된 보험료의 면제조치 창설을 검토함.

글상자 3. 어린이·육아 정책의 강화에 대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입장

- [출산율 개선] '결혼인구 비율의 제고를 위한 두툼한 중산층 형성'과 '결혼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성 가사육아 촉진'의 두 가지 대응과제를 제시
- 결혼인구 비율의 제고를 위한 두툼한 중산층 형성: 민관협력을 통한 '질적 수준이 높은 일자리 창출'과 '구조적인 임금인상'이 필수. 기업은 적극적인 국내투자과 임금인상 등 인적투자를 통해 거시경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청년층에 대한 중점 배분, 임시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경력형성 지원 추진 등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 결혼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성 가사육아 촉진: 지금까지의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한 양립 지원책의 충실화와 함께, 특히 남성의 가사·육아를 촉진하기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 강화, 남성의 육아휴직 지속 사용을 위한 환경 정비 및 사내 의식 개혁, 다양한 일하는 방법(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시차출근 등) 마련, 장시간 노동의 시정 등을 추진할 필요. 이러한 기업의 대응은 각 지역에서의 보육·돌봄교실 수용과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더욱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환경 실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재원조달] 향후 정부가 제시하는 장래 어린이육아 예산의 2배 증가에는 육아휴직 급여나 아동수당을 비롯한 광범위한 정책 확충이 불가피하고, 적어도 수조 엔 규모의 증액이 전망되는바, 새로운 재원의 선택사항으로는 세금, 사회보험료, 국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세출개혁이나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을 통한 세대간 급여 및 부담의 균형 확보와 함께 최적 조합(best mix)를 실현할 필요
- [인구감소 대응] 향후 일본에서는 지역차를 수반한 인구 감소 가속화, 현역 세대의 감소, 임신·출산의 중심이 되는 15~49세 여성 인구의 지속 감소 등이 전망되어, 설령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어린이·육아 정책의 강화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를 견딜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도 동시에 추진해나갈 필요

자료: 日本經濟団体連合会(2023. 3. 14), 「こども・子育て政策の強化に関する考え方」.

7) 일본은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남성의 1일 가사·육아 시간이 1시간 54분으로, 스웨덴 3시간 21분, 노르웨이 3시간 12분, 미국 3시간 7분, 독일 3시간, 영국 2시간 46분, 프랑스 2시간 30분 등 국제비교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본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이 길수록 여성(부인)의 계속취업 비율이 높고, 둘째 아이 이후의 출생 비율도 높게 나타남. 内閣官房(2023), 「こども政策の強化に関する閣府省会議 - 参考資料集」, p. 17.

■ 넷째, 위의 세 가지 부문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어린이·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어린이와 자녀 양육을 응원하는 지자체 및 기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
- 정부도 어린이와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며, 우선 국가시설에서 어린이 동반자가 힘들게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설치하고 이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로 확대함.

표 2. 기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현황

주요 정책	구체적인 정책 내용
1. 아동수당 확충 등 경제적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확충] 아동수당 소득 제한 철폐, 지급기간은 고교 졸업 때까지 연장. 아동수당액은 다자녀 세대가 감소 경향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재검토, 재원방안에 대한 결론을 2023년 6월까지 도출 -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비용의 보험적용 도입 등 지원방향 검토 - [의료비 부담 경감] 지자체의 어린이 의료비 조성에 대해 건강보험의 감액조정 조치를 폐지. 학교 급식비 무상화 추진 -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비 대출의 감액반환제도는 이용가능한 연수입 상한을 325만→400만 엔으로 인상. 수업료 감면 및 급부형 장학금은 2024년부터 다자녀 세대이거나 이공·농업계 학생 등이 있는 중산층(세대 연수입 약 600만 엔)으로 확대. 등록금후불제도(가칭)는 2024년부터 석사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도입 - [육아 세대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추진. 주택 금융지원기구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은 다자녀 세대를 우선 배려하는 등 지원의 내실화 도모
2.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강화 등 모든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기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확충] 임신 시기부터 출산·육아까지 동일한 보건의사가 상담하는 등 동반형 상담 지원의 제도화 검토, 산후 케어사업의 실시체제 강화 등 추진 - [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 보육사의 배치 기준 개선(1세 유아는 6대1→5대1, 4~5세 아동은 30대1→25대1)과 민간급여를 감안한 보육사의 처우개선 검토 - [보육 확충] 부모의 취업요건을 불문하고 시간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누구나통원제도’(가칭) 창설 검토, 미취원 아동의 입시보호 지원 등 추진 - [새로운 방과후 어린이 종합플랜 실시] 방과후 학교 대기아동(1.5만 명 정도)을 위해 장소 확충 및 직원배치 개선 등을 도모 - [다양한 지원 요구 대응]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및 소년소녀가장(young carer)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의 장애아 지원체제 강화 및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적 돌봄아, 청각장애아 등을 위한 지역 연계체제 강화. 한부모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강화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고등직업훈련 촉진 급부금제도 확충 등에 대응
3. 맞벌이·공동육아 추진 (일하는 방식의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제도 측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를 2025년 공무원 85%(1주 이상) 및 민간 50%, 2030년 공무원 85%(2주 이상 사용률) 및 민간 85%로 설정, 육아·간병휴직법상 육아휴직사용률 공개제도 확충 검토 등 <급여 측면> ‘산후 아빠 육아 휴직’(최대 28일)을 염두에 두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7%(실수령 80% 상당)에서 80%(실수령 100% 상당)로 인상. 남녀 모두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면제 및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조치와 함께 동료 직원에 대한 응원수당 지급 등 육아휴직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대폭 강화 - [육아 부모 지원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추진] 자녀가 3세~초교 입학 전인 경우 단시간 근무, 재택근무, 출퇴근시간 조정, 휴가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고,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 시간 단축근무 선택 시 급여

주요 정책	구체적인 정책 내용
	를 창설함. ‘자녀간호휴가’(자녀 취학 전 연 5일간 취득 인정)의 대상 아동 연령 및 휴가취득 사유의 범위 등에 대해 검토 -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의 노동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자영업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해 육아 기간의 보험료 면제조치 창설을 검토
4. 어린이·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 개혁	- 어린이와 자녀 양육을 응원하는 지자체 및 기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 구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어린이가정청에서 검토하여 2023년 여름경부터 대응을 시작할 계획 - 정부도 어린이와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하며, 우선 국가시설에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설치하고 이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로 확대

자료: こども政策担当大臣(2023), 「こども・子育て政策の強化について(試案)~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に向けて~」, pp. 9~17.

3. 평가 및 시사점

■ [평가] 이번 기시다 정부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와 지급기간 연장, 어린이집 이용 범위 확대, 육아휴직급여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과거 저출산 대책과 ‘차원이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혼재함.

- 먼저 일본 민간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정부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는 20.3%(기대하지 않는 층은 44.7%)에 그치고 있음.⁸⁾
 - 기대하는 이유로 ‘일본의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기대한다는 응답자 중 56.8%), ‘저출산의 진행을 막아 주었으면 한다’(48.8%) 등이 있었으며, 기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의 과제인식이 허술함’(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 38.8%), ‘과거 저출산 대책의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38.5%) 등이 있음.
- 이번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정책 목표의 차별화, 정책 대상의 확대 등이 있음.
 - 이전 정책과의 차별성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파고 들었다는 점에 있음.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임신에 대한 의사결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데 거부감이 강해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정책 개입이 금기시 되었으나, 이번에는 청년세대의 장래 전망을 그리기 쉽게 하여 희망하는 자녀의 수 자체를 증가시키고자 하고, 육아를 중시하도록 사회 의식을 바꾸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됨.⁹⁾
 - 기존 육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결혼을 앞둔 청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있음.¹⁰⁾
- 반면 이번 정책은 이전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있음.
 - 다이쇼대학의 코미네(小峯) 교수는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의 낙관적인 정책 목표의 현실화,

8) 久我 尚子(2023. 4. 27), 「少子化進行に対する意識と政策への期待(2)-これから子育て世代で約3割が期待, 経済基盤の安定化と社会の意識改革が必須」, ニッセイ基礎研究所.

9) 宇南山卓(2023. 4. 28), 「異次元の少子化対策」とは何か, 『日経研月報』, 2023年 6-7月号, 日本経済研究所.

10) 金 明中(2023. 2. 12), 「出生率0.81の「韓国」で起きている少子化の深刻/OECD加盟国の中で1を唯一下回る, 対策は?」, 東洋経済オンライン, <https://toyokeizai.net/articles/-/651025?page=5>(검색일: 2023. 4. 28).

재원을 동반한 저출산 예산의 확충, 국기와 지방의 역할 분담 재검토 등을 감안해야 다른 차원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¹¹⁾

- 이외에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함께 향후 일본의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견딜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및 인구감소하의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린이·육아 정책의 강화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를 견딜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게이단렌), 복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제·사회를 지향(코미네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¹²⁾
 - 또한 일본에서는 경제성장의 첫 번째 요소인 노동력이 앞으로 급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머지 요소인 자본(설비투자 확대)과 기술력(인적자본투자 확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¹³⁾

■ [시사점]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책 과제별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한·일 정부간 대화를 통해 공통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실행력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수립하여 정책 목표별로 구체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제시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¹⁴⁾
 - 또한 최근에 발표된 저출산 정책¹⁵⁾이 분야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둔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 목표 및 달성시기가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으므로, 향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시 이를 점검·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낮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의 개선을 위해 2025년 및 2030년의 시기별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3년간의 집중 대응기간(2024~27년)에 추진 상황 및 대응 효과를 점검하면서 계획·실행·평가·개선(PCDA)을 추진할 방침임.
- 최근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정부간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국이 공통의 정책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전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2014년 도입), ‘3+3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2022년 도입) 등의 실시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8년 17.8%, ‘19년 21.2%, ‘20년 24.5%, ‘21년 26.3%, ‘22년 28.9% 등으로 꾸준히 증가¹⁶⁾
 - 일본 기시다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재원에 대해 6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수립 시 함께 공표할 예정임. **KIEP**

11) 小峰隆夫(2023. 3. 18), 「経済を見る眼-私が考える本当の「異次元の少子化対策」」, 週刊東洋経済.

12)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23); 小峰隆夫(2023).

13) 「少子化対策の視点(下)人口減前提の成長モデルを」(経済教室)(2023. 3. 29), 『日本経済新聞』.

14) 「저출산 대책에 280조 투입? 출산율 정책의 목표부터 세워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93> (검색일: 2023. 4. 28).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1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 1. 25),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p. 1.